

장애아동을 위한 작은 제언

심재익(서울신문 사회부 차장)

■ 장애인을 보는 정치적 시각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면, 그래서 한 사회의 정책이 가장 순수한 인간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장애인도 아동, 노인, 여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의 배려 대상이어야 옳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아동들이 가장 먼저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애인의 보행 권을 보장한다며 보도의 턱을 꺾고, 장애인 전용 지하철 승강기를 설치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장애아동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문제는 “할 만큼 했다.”고 여기는 자기만족이다. 이런 정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 배려의 부족은 각성의 여지가 있지만 “할 만큼하고 있는데 뭘...”이라는 시각에는 그런 각성이 개입할 여지마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에게 사막이다. 판단의 기준은 간단하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자식 좀 잘 키워 보겠다.’며 줄줄이 이민 보따리를 싸고,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담한 절망감 속에서 육아와 교육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면 이보다 더 명쾌한 기준은 없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슬한 여성들이 출산 전에 태아의 신체적 문제를 감지하면 “그 정도는 괜찮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이를 주저 없이 ‘떼버리는’ 현실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의 한 단면

이 대목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진단을 되짚어보자. 그가 ‘(전략)공적 세계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줄 권리, 타인을 상대로 발언하고, 타

인의 발언을 경청할 권리, 즉 진정한 해방이 함축하는 생명과 성장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인격보다 더 우위에 있는 아이들을 포기하고 배반하는 일’이란 바로 교육 기회의 박탈이다.

그들이 교육을 통해 세상과 교류하지 못하고, 모든 전통과 비전으로부터 차단되며, 단지 신체적 불리함을 지적 능력과 영감, 용기의 결핍으로 오해하게 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 그것도 장애의 상당한 책임이 거의 항상 국가에 귀착되는 실체를 자신의 전부인 양 여기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장애아동은 확실히 ‘배제’와 ‘차단’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감금돼 있다. 따라서 보통의 인간이 향유하는 자유까지도 그 자체가 명백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는 가장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차단된 환상일 뿐이다. 여기에서 장애아동이 가져야 할 자유를 ‘불가피하게 그래야 하는 비장애인의 최소한’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현실론 이전의 야만성이다. 자유는 인간과 인간집단에 있어 모든 생산의 기본 조건이다. 파멸의 재앙 앞에서도 자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고무하고 격발한다.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유를 토대로 한다. 이 원천의 힘을 배제하고도 “장애아동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야만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교육이라는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인 교육 실태는 어떤가. 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효

한 교육의 터전인 가정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을 떠나서도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춘 곳을 찾기는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불굴의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자의 부족이다. 우리는 이를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는 저급한 논리로 뭉개 왔다. 이것이 소득 1만5000달러 시대의 자화상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나라에 16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다고 하나 길거리에서 장애아동을 보기는 쉽지 않다. 답은 간단하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에는 사회적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장애아동을 데리고 도시의 길을 가자면 끊임없이 마주치는 사회적 장애, 즉 시설의 결핍과 부단히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 장애인 정책의 전환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책이 상대적 고통자인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장애를 가진 유아나 어린이의 고통을 성인의 그것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시각이 바로 정치적이다. ‘울지 않으면 그나마 떡 하나도 주지 않는’ 후진적 정책화의 관행은 당연히 성인 장애인 중심의 전도된 정책을 낳았다. 그렇게 해서 일론 정책효과를 보고, 또 우선 입막음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정책의 불합리는 아주 오랫동안 ‘성인

의 뒷'에 국가를 가렸다. 정책이란 그 속성상 한 곳에서 적정한 수요 충족이 이뤄져야 여력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데, 성인을 첫 표적으로 삼다보니 웬만한 투자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때문에 성인 중심의 정책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같은 정도의 장애라면 성인보다 유아나 어린이가 느끼는 고통이 더욱 크다는 사실은 상식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장애인정책은 연령의 역순을 밟아 가는 게 순리이며, 바로 이런 정책 유형이 서구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의 구현이다.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복지에 국가가 가장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형식의 다른 표현일 뿐이므로 그렇다.

복지에 관한 국가 기능의 현대적 해석은 갈수록 책임영역이 확대된다는 데로 모아진다. 비록 이런 영역의 확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뜻하는 않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약자에게 기회와 시혜를 우선 부여하는 것은 진리적 명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모든 가능한 사회적 역량과 비전을 투자해야 하고, 그래서 그 지점으로부터 순차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효과를 수확할 수 있는 장애아동들에게로의 시선 맞추기이다. 쉽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적어도 그들을 껴안아야 하는 우리의 순정한 인간애가 정치적 이해타산과 득실 계산의 소도구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